

중동사태 불안에도 '우상향'... 비트코인, 월간 11% 상승

비트코인 1BTC당 8만792달러
이더리움 한달새 4%, 리플 7% 등
알트코인 가격도 전반적 상승세
美-이란, 확전 가능성 하락 영향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선을 다시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11일 서울 강남구 빙셀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상승세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전 우려는 대부분 잦아들 영향이다. 미국 내 금리 인하가 가속 될 것이라 기대감과 예상을 뒤집은 고용지표 등 호재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1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79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0.05% 상승한 가격으로, 6일 연속 8만달러를 상회했다. 월간 가격 상승폭은 10.91%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초 이후 계속해서 8만달러를 하회했는데, 3개월여 만에 8만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이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한달 전과 비교해 4.05% 상승했으며, 시총 3위 리플(XRP)은 7.31% 올랐다. 시총 4위 바

이낸스(BNB)는 7.63%, 5위 솔라나(SOL)는 12.76% 상승했다. 대표적인 'میم코인(유행을 테마로 한 가상자산)'인 도지코인(DOGE)의 월간 가격 상승폭은 17.08%에 달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중동사태'의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며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돼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제 방어적 성격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적 적대

행위'의 종단을 표방한 만큼, 시장에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트럼프가 최근 이란 측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즉각적인 종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이란의 '대표들'이 보낸 답변을 봤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내정자 취임 시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상승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종료된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된 금리 인하 요구에도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왔다. 워시 내정자는 매파적(긴축 선호)인 인물로 평가받지만, 차기 의장 지명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동의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충격'으로 침체됐던 미국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시장 기대감을 키웠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월 미국 고용지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적정 수준)의 흐름을 보였다"라며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이벤트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주요 자산가격의 상승 압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롯데건설

AAA등급 채권 발행 3000억원 자금 조달

롯데건설이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 금융상품을 자체 개발해 '트리플 A(AAA)'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11일 밝혔다.

3000억원의 유동화증권 중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 3개월로 구성돼 있다.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ABS는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여기에 하나은행의 신용공여(1500억원)와 롯데건설의 예금 운용 등을 통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등급으로 발행됐다. 발행된 채권 등급은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아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을 바탕으로 필요 시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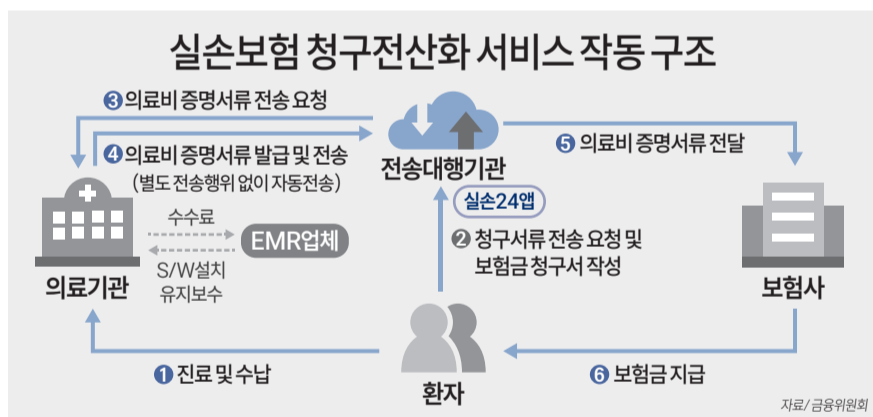
보험금 간편청구 확대... 연내 의료기관 90% 참여 목표

금융위, EMR업체 서비스 참여 독려
참여 미진 업체 과태료 등 제재 논의

금융위원회가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보험금을 비대면으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하반기 내에 80~90%까지 확대한다. 특히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해 참여가 필수적인 EMR(전자 의무기록)업체의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가 미진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해 서비스의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



준으로 약 3만614개의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연계율은 약 29%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56.3%에 달했으나, 의원 및 약국의 연계율은 26.8%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손24' 앱에 가입한 국민은 377만명이었고, 실손24를 통해 청구완료된 청구 건수는 241만건이다.

정부는 EMR업체의 참여를 위한 서비스 개선 절차가 완료되는 6월부터 총 청구전산화 서비스의 연계율이 최대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80~90%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연계 부진의 요인이었던 대형 EMR업체의 미참여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미참여가 지속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

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사진을 찍어 청구하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의료계와 보험사에도 서류 발급·처리 부담 경감 등으로 이익이 되는 '국민서비스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실손청구 전산화 도입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에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EMR업체 등이 불참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개선 실거주의무 예외 허용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이 개선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혜택이 강화되며,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실거주의무 예외 조건이 신설된다. 수급자 사망 이후에도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제도도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만큼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한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가입기간 중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약정 받은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가 1억 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혜택 확대 ▲가입 시 실거주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등이다. 단, 이번 개선 사항은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월 수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확대된다. /안승진 기자

금융·유동성 압박... 경기권 아파트경매 급증

지난달 30%가량 늘어난 1097건
전국 경매건수 3790건 7.2% 늘어

지난달 경기권에서 아파트경매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매매시장에서는 경기권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과는 달리 경매 시장은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에 따른 물량 출회와 이어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법원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경매건수는 379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7.2%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1097건으로 전월 대비 30% 가량 급증하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경매건수가 가장 많았다. 수도권 외곽과 일부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경매 물량이 늘었다. 경매건수는 평택시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92건 ▲김포시 71건 ▲고양시 일산

서구 71건 ▲파주시 68건 등이다.

경기는 매각가율 역시 84.3%로 전월 86.0%에서 소폭 하락했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권에서는 외곽 및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며 "같은 경기권 안에서도 광명·성남 분당·하남·안양 동안·의왕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각가율과 응찰 경쟁이

이어지는 등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경기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이 전월 대비 경매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광주는 136건에서 199건으로, 울산은 59건에서 110건으로 늘어나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서울의 경매건수는 198건으로 전월(211건) 대비 감소했다.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비율인 매각율도 서울은 41.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매각가율은 90% 이상으로 전국 평균치(83.9%)를 크게 웃돌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